



주간 통일정세

2008-16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금수산기념궁전 참배(4/1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故) 김일성 주석의 96회 생일(4.15)을 맞아 인민군 지휘관들과 함께 김 주석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
-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군대의 지위성원들과 함께 김일성 동지께 경의를 표했다”며 이날 참배에 김격식 군 총참모장,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지휘성원, 인민군 장령들”이 동행했다고 보도
- * 김 위원장이 올들어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한 것은 처음이며, 2007년에는 신년 첫날과 군 창건 75주년(4.25)을 맞아 참배

나. 정치 관련

● 南, 대결 고수하면 더 강도높은 조치(4/20, 민족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최성익 책임참사는 이명박 정부가 “6·15선언의 정신을 거부하고 10·4선언을 부정하면서 반민족·반통일로 가며 지금과 같은 자세를 고수한다면 앞으로 더욱 강도높은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민족통신이 보도
- 최 책임참사는 4월 16일 재미동포 온라인 매체인 민족통신의 노길남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향후 북한의 조치를 어떻게 예상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현장의 조달청 소속 상주직원을 추방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히고, “요즘 남조선 여론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프로권투 선수의 연결타격’을 연상해 보면 그 예상을 내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그는 “북남관계가 경색으로 가면 흩어진 가족들의 불만도 높아질 것”이고 “특히 이명박 정권이 북남관계 정상화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반통일의 길로 나간다면 민심을 얻을 수 없다”면서 “이명박 정권이 살 수 있는 길은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고 관철하는 길 밖에 다른 방도는 없다”고 강조
- 최 참사는 “문제의 근원은 이명박 정권의 성격에 있다”며 이명박 정부를 “친미사대매국정권이자 반북·반통일정권”이라고 비난한 뒤 “입만 열면 한미동맹이요 하며 친미사대주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표방하며 미국과 공모”하고 “특하면 ‘잃어버린 10년’인데 그 10년에 북남관계가 얼마나 진전돼 왔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이 정권은 이것을



뒤집어 엮고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6·15선언과 10·4선언 정신을 뒤집어 엮자는 것이며 우리 민족을 외세의존으로 끌고 가기 위한 의도를 내비친 말”이라고 일축

- ‘비핵·개방·3000’과 관련, 그는 “개방이라는 말은 체제를 변화시키고 사회주의를 포기하라는 것”으로 “한마디로 주제넘은 소리”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작년 남북정상회담 때 개방이라는 말을 했다가 “우리에게 단단히 얻어맞고 다시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외자를 도입하고 동남바가지를 차고 다니며 우리를 개혁·개방으로 유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제 코나 씻으라’로 말한다(대답한다)”고 언급

● 北 ‘통일위업’에서 남북기본합의서만 제외(4/1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남북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개최 60주년을 기념한 ‘민족 대단결 실현에 바치신 고귀한 업적’ 제하 글에서 “1972년 7·4북남공동성명에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 제시,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의 제시, 1993년 전 민족 대단결 10대강령의 발표는 주석께서 지니신 민족 대단결의 이념이 연속 승화돼 펼쳐진 역사적 과정이었다”고 주장, 그러나 통신은 1991년 12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된 남북 기본합의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음.
-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 주석의 ‘민족대단결 위업’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면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마련돼 ‘우리 민족 끼리’의 이념과 의지로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가는 새로운 통일시대가 펼쳐지게 됐다”고 덧붙임.

● 김하중 통일부 장관만 지목해 원색 비난(4/19,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 노동신문은 김하중 통일부 장관만 지목해 “반통일 역적” 등의 원색적 표현을 동원해 집중 비난, 특히 “북남관계의 전도를 위해 반통일 대결 광신자인 ‘통일부’ 장관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남조선의 민심”이라고 주장하고 김 장관이 “계속 통일부 장관 행세를” 하는 것을 “우리 민족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공세 방향을 예고
- 신문은 “그는 분명 통일을 하자고 장관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손발이 되어 통일을 방해하고 북남대결 시대를 몰아오려고 그 자리에 틀고 앉았다”면서 “이런 자가 통일위업을 해치려고 날뛰는 한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대결의 심연 속에서 빠져 나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비난



있는데 천만의 말”이라며 “우리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고 ‘우리민족끼리’ 이념을 존중하지 않는” 측과는 “절대로 상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흥정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다. 경제 관련

● 내각회의 열고 식량문제 논의(4/20, 신화통신; 민주조선)

- 중국 신화통신은 20일 민주조선을 인용해 북한 내각이 최근 확대회의를 열고 올해 경제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 민주조선에 따르면 북한 내각은 회의에서 ‘인민생활 제일주의’의 원칙을 관철하고 식량문제와 소비품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기로 결의
- 한편 올 1분기 북한의 주요 품목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하는 등 공업총생산이 늘어나 북한 경제가 양호한 국면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에도 전력과 석탄, 금속, 운수 등 국민경제 선행부문 발전에 역량을 계속 집중하기로 함.

● 北 IT인력 인도 기업에도 취업(4/16, 연합)

- 북한의 정보기술(IT) 산업이 남한에 비해 뒤지지 않을 정도로 세계적 수준을 갖추고 있으며 컴퓨터 백신 등은 직접 만들어 사용하거나 해외기업에 수출하고 있다고 네덜란드의 IT자문사인 GPI컨설턴시 폴 치아 대표가 주장
- GPI컨설턴시는 5월 13일부터 북한의 조선컴퓨터센터와 김책공대, ‘틴 밍 알란’(동영상제작소) 등을 방문해 컴퓨터 게임과, 만화, 동영상 부문을 시찰하는 방북프로그램 참여사를 모집한 결과 남한과 미국기업들로부터도 참가신청을 받았지만, “북한이 남한 신청자들에게 대해선 문제삼을 것 같다”고 치아 대표는 말하고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남한과 미국기업을 제외한 유럽기업들만 갈 것이라고 언급

● 北김영남, 2012년에 강성대국 달성목표(4/14,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TV)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4일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이 고 김일성 주석의 “한평생의 뜻”이었다며 김 주석의 출생 100돌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고 강조
- 김 상임위원장은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채 평양 체육관에서 열린 김 주석 96회 생일(4.15) 기념 중앙보고대회 보고를 통해 이렇게 말한 뒤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생명선인 인민경제 선행부문·기초공업부문을 결정적으로 치켜세우며 농업혁명, 경공업 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실질적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촉구



라. 군사 관련

● 北어선, 한때 NLL넘어 남측 수역 진입(4/18, 연합뉴스)

- 18일 오전 8시께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측 어선 1척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측 관할수역에 진입했다가 50여 분만에 회항
- 합참은 “북측 어선은 NLL 남쪽 1마일 해상까지 내려왔다가 50여 분만에 북측 관할수역으로 돌아갔다”며 “해경이 국제상선공통망의 통화 내용을 청취한 결과 항로착오로 남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힘. 합참은 “이 어선을 보호하기 위한 북측 경비정도 없었고 단순한 항로이탈로 판단돼 특별한 대응은 하지 않았다”고 발표

● 北, 군장성 35명 승진인사(4/15,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5일 고 김일성 주석의 96회 생일(4.15)을 맞아 군 장성 35명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19호’를 통해 강국중과 백영철을 중장(남측의 소장급)으로, 최광준을 비롯한 33명을 소장(준장급)으로 승진시킴.
- 김 위원장은 이번 ‘명령’에서 “인민군 지휘성원들이 앞으로도 당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제도, 우리의 위업을 굳건히 지키며...자기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언급
 - *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생일이나 노동당 창당일 등 기념일을 전후해 노동당중앙위·국방위원회의 ‘결정’이나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군 승진인사를 하고 시행

마. 사회·문화 관련

● 성화봉송주자에 런던월드컵 주역 박두익 포함(4/19, 조선신보)

- 4월 28일 올림픽성화 봉송 행사를 사상 처음으로 갖는 북한의 성화주자에 1966년 런던 월드컵대회에서 북한팀이 이탈리아를 꺾고 8강에 진출할 때 결승골의 주인공이었던 박두익이 포함됐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평양 주체사상탑에서 김일성경기장까지 20km 구간을 달릴 성화주자는 모두 80명, 이 가운데 북한측은 박두익을 비롯해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 우승자 정성옥 등 “체육부문에서 특출한 기여와 공헌을 한 사람들” 위주로 노동자, 학생, 사무원들, 재일교포 3명을 포함해 모두 56명이었고, 나머지는 국제올림픽위원회 관계자, 류효명 대사를 비롯한 북한주재 중국대사관 직원들, 북한주재 화교대표, 후원단체 관계자들이라고 보도
- 성화 봉송은 주체사상탑 광장-주체사상탑 거리- 비파거리-영웅거리-천리마거리-영광거리-승리거리-김일성경기장으로 이어지며, 이



러한 노선은 북한의 조선올림픽위원회와 평양시인민위원회가 “우리 인민들이 사랑하는 평양의 거리”를 기준으로 설정

● **중국인 대상 ‘칠보산 관광’ 재개(4/16, 길림신문)**

- 2007년 11월 중단됐던 북한의 청진·칠보산에 대한 중국인 대상 관광이 4월초 재개됐다고 중국 동포신문인 길림신문이 16일 보도
- 칠보산 관광사업을 전담하는 연변해란강국제여행사는 1박2일의 회령·청진·경성코스와 3박4일의 회령·청진·경성·칠보산 코스를 관광객들에게 제공

● **꽃파는 처녀 중국 나들이(4/15, 연합)**

- 북한의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가 15일 중국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중국 순회공연을 시작, 관객들의 상당수는 36년 전인 지난 1972년 영화로 중국에서 흥행한 ‘꽃파는 처녀’를 잊지 못해 이번에 다시 공연장을 찾은 중장년층으로 구성

● **평양음식점들, 김일성생일 특식 판매(4/15, 조선중앙TV)**

- 평양의 유명 음식점에서 고 김일성 주석의 96회 생일(4.15)을 맞아 다채로운 요리를 판매하고 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TV가 소개
- 조선중앙TV에 따르면 만경대 천석식당은 평완자국수와 털계짬을 비롯해 비빔밥, 온반, 불고기, 전골, 부침개 등을 서비스하고 있음.

● **김정일 지시로 강냉이국수 보급(4/15, 조선신보)**

-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강냉이(옥수수) 국수를 만들어 파는 전문식당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조선신보는 15일 평양시 민들 사이에서 강냉이 국수가 “별식으로” 새로운 주목을 받고 있다며 지난해 평양면옥을 비롯한 평양 시내 여러 식당에서 새로운 가공 방법으로 만든 강냉이 국수가 첫선을 보인 데 이어 “올해에 들어와 서도 시민들의 수요가 더욱 높아 시내 곳곳에 강냉이 국수를 봉사하는 전문식당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고 보도
- 김 위원장은 강냉이로 만든 음식중에 강냉이 국수가 제일 좋이라며 “여러차례 걸쳐 강냉이 국수의 맛과 질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까지” 설명해주고, 평양 시내 곳곳에 강냉이 국수집을 열고 이를 위한 국수집 운영을 위한 원자재 공급 대책도 세워주도록 지시했다는 것

● **간판 여성앵커에 승용차 등 특급대우(4월호, ‘조선’)**

- 북한이 정부나 외무성 성명 등을 통해 비중있는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때마다 조선중앙TV에 단골로 등장하는 리춘희씨는 ‘인민방송원’과 ‘노력영웅’의 칭호를 갖고 북한TV의 메인뉴스인 저녁 8시 뉴스 앵커를 맡고 있으며 당국으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제공



받는 등 '특급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北 대중음식점 청류관 새 단장(4/14,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평양의 대중음식점인 보통강변의 청류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14일 당·정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보도
 - 1982년 4월 개관한 청류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2007년 9월부터 현관홀, 종합식사칸, 대중식사칸에 대한 개보수 공사가 진행돼 왔으며, 이 공사에는 북한의 대표적인 건축설계 연구기관인 백두산건축연구원과 공병부대가 동원
 - 준공식에는 김 비서 외에 김영일 내각 총리,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등이 참석

- **아리랑공연 8월4일 개막(4/14, 연합)**
 - 북한이 올해 아리랑 공연을 8월 4일부터 9월 말까지 할 예정이라고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북한 전문여행사인 고려여행사가 14일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
 - 여행사는 홈페이지 공지에서 특별히 미국인을 위한 4박 5일 여행 상품을 소개. 이에 따르면 미국인 관광객은 8월 16일부터 10월 11일까지 7차례의 방북 프로그램을 선택가능

2. 대외정세

가. 북·미 관계

- **美실무팀, 북핵신고서 내용·검증방안 집중협의(4/19, 연합)**
 - 4월 22일 방북할 것으로 알려진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을 포함한 미 행정부 실무팀은 북한 측과 공식 핵 프로그램 신고서의 내용은 물론 핵심 쟁점에 대한 향후 검증 방안도 집중 협의할 것으로 알려짐.
 - 특히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 미국내에서 비판적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실무팀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핵 협력의혹 등에 대해서도 ▲그동안 제기된 주요 증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 ▲향후 우라늄농축활동과 해외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방안 등을 분명히 하는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전해짐.

- **北군부, 이례적으로 美방북단 면담(4/18, 자유아시아방송; 연합)**
 - 북한군의 이찬복 상장(중장급)이 최근 미국의 방북단을 맞아 북한군은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하며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적성국교역법 적용의 해제와 테러지원국 지정 "정치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방북단에는 스티븐 보스워스 전 주한 대사와 토니 남궁 뉴멕시코 주지사 수석 고문, 모턴 아브라모위츠 전 국무부 정보·연구담당 차관보, 미 사회과학원 레온 시갈 박사, 미 해군대학의 조나단 폴락 박사, 제럴드 커티스 콜롬비아대 교수, 로버트 스칼라피노 버클리대 명예교수, 스티븐 델 로소 뉴욕 카네기재단 국제평화 안보담당 국장이 참여

- 보스워스 전 대사는 “북한군 고위인사들은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개선을 희망했다”면서 “특히 정치적 보상의 일환으로 적성국 교역법의 적용을 중단하는 것을 가장 원했고, 그 다음으로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를 원했다”고 주장, 이찬복 상장은 북한군이 미국과의 장기적인 정치적 관계개선을 추구한다는 점을 거듭 밝히면서 동시에 미국에 대한 군사적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보스워스 전 대사는 설명

● 北, 美 달러위조설, 정세 악화용 궤변(4/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스투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 및 금융정보담당 차관보가 최근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정세를 고의로 악화시키려는 궤변”이라고 주장하면서 “10·3합의 이행에 저촉이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

나. 북·중 관계

● 베이징 올림픽에 김영남 참가(4/18, 연합)

- 북한은 8월 8일 개막하는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대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이 18일 전언

다. 북·일 관계

● 민주조선, ‘로켓포 수출’ 日 언론보도 반박(4/18,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비열한 자들의 유치한 모략 선전’이라는 논평을 통해 북한이 미얀마에 다연장로켓(MLAR)을 수출하기 시작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상투적이고 유치한 날조 선전”이라고 반박
- 신문은 특히 이런 보도가 일본의 대북 제재조치 연장, “(조)총련 탄압” 강화 등과 함께 나온 것은 일본 정부가 “국민의 눈초리를 딛 데로 돌려 세우는 방법으로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 노동신문, 대일 비난 南정부 연계 비난(4/18, 노동신문; 4/17,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18일 한·일 정상회담을 사흘 앞두고 일본의 대북 제재 연장은 “남조선(남한) 이명박 정권의 출현과 결코 무관치 않다”고 주장



- 신문은 ‘불순한 목적을 노린 제재연장 소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일본과 관계 회복을 표방하며 그의 과거 범죄를 눈감아주고 독도 강탈 기도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 또 일본 정부의 대북 경제제재 연장으로 “후쿠다 정권의 비이성적이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적 자세가 더욱 뚜렷이 드러났다”면서 “일본반동들은 이명박 패당과 작당해 우리 공화국에 대한 포위망을 좁히고 반공화국, 반총련 압살이라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제재 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
- ‘우리민족끼리’는 17일자 논평에서 이명박 정부가 실용외교를 내세워 “동족을 반대하는 침략공조체계 수립”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일본은 남한에 “보수 정권이 들어선 기회에 ‘일한공조’와 ‘관계복원’을 코에 걸고 독도강탈 음모를 실현해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

라. 북·러 관계

● **北철도대표단 러시아 방문(4/19, 조선중앙통신)**

- 김용삼 철도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철도성대표단이 러시아 방문차 19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마. 기타외교 관계

● **北, 기니 대사에 리경선 임명(4/20, 조선중앙통신)**

- 아프리카의 기니 주재 대사로 리경선씨를 임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리경선 신임 대사는 최근까지 외무성 보도국 부국장으로 활동
- * 북한은 기니와 1960년 6월 수교한 뒤 대사관을 현지에서 주재시키고 활발하게 교류

● **이탈리아, 내주 대북 식량지원(4/18, 자유아시아방송; 연합)**

- 유럽 국가들 가운데 이탈리아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다음주 중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에 나선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 이탈리아가 100만유로 상당의 곡물 2천650t을 다음 주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들여 보내기로 했다고 보도

● **北대표단, 유엔무역개발회의차 평양 출발(4/17, 조선중앙통신)**

- 리명산 무역성 부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제12차 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17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4월 20~25일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열리는 총회에는 100여개국의 장관급 인사들이 참가할 예정

● **김정일, 시리아와 관계 강화 확신(4/17, 연합)**

- 미국이 북한과 시리아간 핵협력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북한의 김



정일 국방위원장은 17일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보낸 독립 62주년 축전에서 양국간 협력관계의 강화에 대한 확신을 표시
-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우리 두 나라 인민 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 관계가 끊임없이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며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 것과 당신과 귀국 인민이 앞으로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한다”고 언급

● 최태복, IPU 참석차 남아공 도착(4/17, 평양방송)

-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제118차 국제의회연맹(IPU) 총회 참석차 14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수도 케이프타운에 도착했다고 평양방송이 17일 보도

3. 대남정세

● 李대통령, 김정일은 대화해야 할 상대(4/19, 연합)

- 이명박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화할 해야 할 상대”라고 언급,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워싱턴 영빈관에서 열린 ‘한반도 전문가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남한과 북한은 실질적인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북한도 과거와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아니라 남북이 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실하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
- 대통령은 또 대북인도적 지원과 관련, “핵 문제와 관계없이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북한을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물론) 북한도 인도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 이어 6자회담과 관련해 “북한과 협상을 하려면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면서 “관련국들 간에 긴밀한 협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언급
- 이날 간담회에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 부장관, 에드윈 풀너 헤리티지 재단 회장, 존 햄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회장, 웬디 셔먼 전 대북정책 조정관, 제임스 슐레진저 전 국방장관, 존 킬러리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 11명이 참석

● 北에 연락사무소 설치 제의(4/17, 연합)

- 이명박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 남북한 간에 고위급 외교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언급,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서 워싱턴 포스트지와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
- 이 대통령은 특히 “연락사무소의 책임자는 남북한의 지도자와 직접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면서 “과거에는 필요할 때마다 대화가 이뤄졌으나 이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남북한 간에는 항



상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

● 정부, 남북 이산가족행사 韓赤 이양 추진(4/16, 통일부)

-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행사 등 이산가족 관련 업무를 대한적십자사에 이양, 통일부 관계자는 16일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행사 등 남북 간 이산가족 업무를 대한적십자사가 중심이 돼 이끌어가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이 문제를 적십자사와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밝힘.

● 새 정부 남북기금 집행액, 1천200만원(4/15, 연합)

- 지난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지금까지 집행된 남북협력기금이 1천200만원에 불과, 15일 통일부와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따르면 지난 2월 통일부에 접수된 대북지원사업을 위한 개별 민간단체의 기금 지원 신청은 모두 63건에 이르지만 현재까지 기금이 지원된 사업은 전혀 없음.
- 통일부 담당자는 “대북지원 개별 민간단체들로부터 지난 2월 기금 신청을 받았으나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밝힘. 그런데 이에 더해 남북협력기금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인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 구성도 마무리되지 않아 기금 지원은 상당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 2007년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가능성 및 남북관계 활성화 등에 대비해 2008년도 남북협력기금 규모를 전년 대비 1천803억원이 증가한 1조2천198억원으로 편성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한중일 정상회담 정례화..올 가을 첫 회담”<日 언론>(4/20)
 - 한국과 중국, 일본 정부가 매년 한차례 각국을 돌아가며 정기적으로 3국 정상회담을 개최기로 하고 올 가을께 첫 회담을 일본에서 개최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본 언론 보도
 -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는 21일李明박(李明博)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내달 초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런 방안에 정식 합의할 방침
 - 일본에서 개최될 1차 한중일 정기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관련해서는 ▲북핵문제 ▲중국의 황사에 따른 환경피해 ▲지적 재산권 보호 ▲한중일 투자협정 체결 등을 중심으로 각국간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 한·미·일 3국, 5월초 북핵 국장급 회의(4/19)
 -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은 북핵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다음달 초순 3자 국장급 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중이라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19일 보도
 -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북미 양국이 급속도로 접근하고 있는 가운데 북핵과 납치문제의 동시타결을 목표로 해온 일본으로서는 정세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 납치문제가 핵문제의 족쇄가 되면, 역으로 납치문제 해결도 멀어지는 결과를 낳는다는 판단에 따라 핵문제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을 경우 제재조치 해제 등 유화적인 접근 쪽으로 선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 “美실무팀 북핵신고서 내용·검증방안 집중협의”(4/19)
 - ‘싱가포르 합의’에 대해 미국내에서 비판적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실무팀은 우리농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 등에 대해서도 ▲그동안 제기된 주요 증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 ▲향후 우리농농축활동과 해외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방안 등을 분명히 하는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음.
 - 20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실무팀의 이번 방북은 싱가포르 합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논의, 북한측이 의장국 중국에 제출할 공



식 신고서 내용을 다듬는 것이 주 목적이며 플루토늄 핵활동 관련 사항이 핵심이 될 전망

-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 교역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미국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UEP와 시리아 핵 협력의혹에 대한 검증 방안도 논의

● 柳외교 “내달 6자회담 재개 준비할 것”(4/18)

-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중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각) “가능하면 다음달에 6자회담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유 장관은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핵신고 프로그램 검증이 끝나기 전에 일부 대북제재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워싱턴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 유 장관은 “현재로서는 (5월에) 진행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준비해서 한미간 협의를 할 것”이라면서 “북핵 신고서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접수되면 미국도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적성국 교역금지법 적용해제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신고와 전후로 (이런 조치들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유 장관은 또 이 대통령이 이날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에 언급, “이번 한미정상회담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라이스 “북핵신고 검증완료前 일부 제재해제”(4/18)

- 라이스 장관은 국무부에서 북핵문제를 비롯한 국제현안과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북핵 6자회담이 그동안 진전이 있어왔지만 조심스럽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남아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하고 “북한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의무를 이행한다면 미국은 대북제재 가운데 일부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및 적성국 교역금지법 적용 해제 가능성을 시사
- 라이스 장관은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제재조치들이 많이 있어서 일부 제재해제 조치를 취하더라도 다자, 양자 차원의 다양한 제재조항들이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북핵 신고문제와 관련, 라이스 장관은 “북한은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면서 “모든 핵프로그램에는 플루토늄 핵프로그램과 우라늄농축 핵프로그램 뿐만아니라 핵확산 활동도 포함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 李대통령, 北에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제의(4/18)

- 이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포스트(WP)와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연락사무소장은 양측이 협의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남북한 최고 책



임자의 말을 직접 전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은 연락사무소 개설 제안과 관련, “과거 방식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북한에 처음 상설적인 대화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 농축 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과 관련, “북한이 어느정도 인정했는지 최종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으나 어느 정도 간접 시인했을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의 특수성으로 봐 그 정도가 되면 시인한 것으로 보고 한단계 넘어가는 것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이 더 이상 핵확산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

● 美백악관 “플루토늄-핵확산 다른 방식으로 다뤄야”(4/18)

-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 18-19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선 6자회담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은 북한에게 모든 핵프로그램과 핵 확산활동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핵불능화 이행 등을 촉구해왔다”고 설명하고, 북한의 핵확산 의혹은 플루토늄 핵활동과는 다른 문제로 “다른 방식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언급
- 와일더 보좌관은 또 북한의 플루토늄 핵활동 신고서와 관련, “북한과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은 (신고서에) 핵무기를 생산한 시설들이 리스트로 제출돼야 한다고 예상하고 있다”면서 “영변핵시설은 물론 광석 농축시설부터 핵실험장까지 다른 시설들도 모두 포함돼야 하며 그것이 핵신고를 통해 우리가 확인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라이스 “북핵 신고문제 진전있지만 조심스러워”(4/17)

- 라이스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내주 예정된 자신의 쿠웨이트·바레인 방문관련 브리핑 도중 북한 핵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 핵활동문제와 관련) 6자회담을 통해 진전을 이뤘는가”라고 자문한 뒤 “그렇다”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도 라이스 장관은 “여전히 주의하고 의심을 가질 이유가 있는가”라고 거듭 자문, “그렇다”라고 답하며 지난 8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북미 양자회담 결과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

● 美·核신고 검증기구 6자회담 실무그룹에 설치”(4/17)

- 손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내역의 검증방법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것은 6자회담 산하의 검증그룹에서 다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중국 지도부를 비롯해 다른 북핵 6자회담 참가국과 북한의 핵신고 내역을 검증하기 위한 기구 설치 문



부가 싱가포르 합의를 통해 이제까지 주장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프로그램 신고 원칙을 포기했다면서 이같이 주장

● **美, 北에 ‘원자로 가동기록’ 등 요구(4/15)**

- 미국은 ‘간접시인’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한 우리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 핵 협력 문제도 향후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북한측에 분명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15일 북핵 현안에 정통한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영변 5MW 원자로의 가동기록이 플루토늄 추출량을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원활한 신고 및 검증을 위해 북한측에 ‘원자로 가동기록’을 핵 신고서 부대자료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음.

● **美 ‘싱가포르합의’ 승인..6자회담 탄력(4/15)**

- 데이너 페리노 미 백악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도출한 합의사항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믿는다. 맞다.(I believe so, yes)”고 답했음. 그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에 따른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6자회담 북핵협상) 패키지의 한 부분이며, 일의 순서에 따라 이뤄질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그것이 일어날 일이라고 시사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라고 말했음.
- 외교 소식통은 “그동안 UEP(우리농축프로그램)와 핵협력 의혹 등을 푸는 데 정력을 쏟아부었다 보니 신고의 핵심인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정작 북·미가 충분히 대화하지 못했다”면서 “신고서 제출을 위해 북한이 원자로 가동기록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음.

● **柳외교 “6자회담 개최후 전략 준비단계”(4/14)**

- 유 장관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미국이 국내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이걸 기초로 중국과 다음 순서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면서 “6자회담이 개최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준비를 관계국과 협의하는 과정이 남았다고 보며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유 장관은 미국 측의 신중론에 대해 “미 국내적으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니 국내 정치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전체 국면에 큰 영향은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낙관론을 유지했음.
- 유 장관은 ‘싱가포르 회동’ 결과에 우리 정부가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미국 혼자 한게 아니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음.



나. 미·북 관계

● 美의회에 북한인권법 연장안 제출돼<VOA>(4/19)

- ‘2008 북한인권 재승인 법안(가칭)’은 공화당의 로스 레티넨 의원이 발의했으며 민주당 소속 하워드 버먼 외교위원장과 게리 에커먼, 대버튼, 크리스토퍼 스미스 등 하원의원 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음. 이 법안은 빠르면 이달 말 외교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
- 이 법안은 특히 미국 정부가 수속기간 단축 등을 통해 탈북자들을 더 많이 수용하도록 ▲탈북자들이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재 대사 등 미 고위관리들이 해당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북한인권특사를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탈북자 진로·신원조회·재정착 등에 대한 한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보도

● “北유사시 中역지 위해 한미 합동대책 원해”<美보고서>(4/18)

- 이 대통령은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통일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빠른 시간내 갑자기 붕괴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중국은 북한 등 이웃나라와 영토 문제에 매우 조심스러운 정책을 쓰기 때문에 쉽게 외국 영토를 점령한다든가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음.
- 이와 관련, 아·태연구센터가 지난 3개월간 이명박 정부의 고위 인사들을 두루 만난 뒤 최근 발표한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보고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에 관해 기술하는 가운데 한국의 고위 안보관계자들이 “북한의 정치질서 붕괴시 한미 합동작전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논의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 보고서는 한국측이 작통권의 이양 조건과 합동비상대책 문제를 미국과 논의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도전, 일부에선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둘러싼 한국내의 더욱 깊은 전략 논쟁”이 있다고 지적

● 美언론, “부시 행정부 北에 또 양보” 비판(4/18)

- 워싱턴 포스트(WP)와 뉴욕 타임스(NYT), 워싱턴 타임스(WT) 등 미국의 주요 신문들은 18일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핵 신고와 관련, 그동안 다짐했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받아내지 못한 채 북한에 양보를 되풀이 하려 한다고 비판
- 포스트는 이날 “평양과의 타협?”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겠다는 기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부시 행정부로부터 다시 한 번 양보를 얻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음.
-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아직도 “미국과 6자회담 다른 당사국들이 북한에 요구하는 핵신고는 일체의 우라늄과 핵확산 활동을 포함



한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는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낚싯바늘에서 빼내주려 한다는 것”이라고 포스트는 밝혔다.

● 北 군부, 이례적으로 美 방북단 면담(4/18)

- 북한군의 이찬복 상장(중장급)이 최근 미국의 방북단을 맞아 북한군은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하며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적성국교역법 적용의 해제와 테러지원국 지정 “정치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이찬복 상장은 지난 10~12일 북한을 방문한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학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으며, 이 자리엔 외무성 관리도 없이 북한군 고위간부 2명만 배석했다고 RFA는 방북단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 방북단에는 스티븐 보스워스 전 주한 대사와 토니 남궁 뉴멕시코 주지사 수석 고문, 모턴 아브라모위츠 전 국무부 정보 연구담당 차관보, 미 사회과학원 레온 시갈 박사, 미 해군대학의 조나단 폴락 박사, 제럴드 커티스 콜롬비아대 교수, 로버트 스칼라피노 버클리대 명예교수, 스티븐 델 로소 뉴욕 카네기재단 국제평화 안보담당 국장이 참여

● ‘북한자유주간’ 26일부터 워싱턴서 개최(4/17)

- 이번 행사는 탈북자 콘서트, 중국의 탈북자 강제추방에 대한 항의집회, 북한 인권보장을 위한 입법촉구 등의 다양한 행사로 짜여졌음.
- 첫날인 26일에는 전 세계에 있는 중국 대사관과 총영사관 앞에서 항의집회와 시위 등이 계획돼 있고, 북한을 위한 기도회, 북한 인권을 위한 상원 앞 집회 및 탈북자들이 참여하는 연주회가 이어진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상·하원 의원들을 방문해 북한 주민들과 탈북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할 계획

● “北, 작년 대중 무역적자 8억1천만달러” <美의회보고서>(4/16)

-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월드 트레이드 아틀라스’와 국제기구, 각국 정부의 통계치를 종합해 최근 작성한 북한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는 2004년 2억1천233만달러, 2005년 5억8천821만달러, 2006년 7억6천416만달러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임.
- 중국측 통계상 북한의 대중 수입중 원유(2억8천200만달러)와 원유 이외의 기름(9천540만달러)이 27%를 차지했고, 북한의 대중 수출품 가운데 석탄 등 화석연료(1억7천만달러)와 각종 광물자원(1억6천400만달러)이 57%에 이르렀음.
- 북한의 전체 무역적자는 2003년 14억7천200만달러, 2004년 17억8천100만달러에 이어 2005년 20억3천700만달러까지 높아졌다가 2006년 13억6천700만달러(수출 23억5천600만달러, 수입 37억2천300만달러)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CRS 보고서는 밝혔다. 대미교역과 관련, 북한은 지난해 172만8천달러 어치의 흰밀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 “北 종교자유·인권 세계에서 가장 억압” <美종교자유委>(4/16)
 - 미국 정부의 독립기관인 미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15일 북한이 종교자유와 다른 인권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하는 나라로 남아 있다며 북한의 종교와 인권 억압 문제,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압력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국제사회의 북한 핵문제 해결노력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약화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강조

- 美CRS, 주북 이익대표부 설치 제안(4/15)
 - CRS는 북한 경제를 분석한 최근 보고서에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의 하나로 외교관계 정상화를 꼽고, 외교관계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쿠바에 설치한 것과 같은 미국 이익대표부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
 - 보고서는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북한의 경제상황을 악화시키기는 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한국 등의 대북 교역 및 지원으로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현 시점에서 김정일 정권이 붕괴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대북 협상과 제재, 압력과 포용으로 ‘인센티브 패키지’를 구성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 일환으로 이익대표부 설치안을 내놓았음.

- “美 달러위조설, 정세 악화용 궤변” <北통신>(4/14)
 - 북한 중앙통신은 이날 ‘황당무계한 궤변’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1일 미 재무성 차관 레비는 국회 상원재정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면서 이미 미국의 조작설로 진상이 폭로된 ‘북조선 화폐위조’설을 또 다시 들고 나왔다”며 “이것은 공화국(북)의 영상을 흐리게 하고 정세를 고의로 악화시키려는 강경보수세력에 추종하는 비열한 궤변”이라고 비난
 - 이 통신은 “지난 시기 마카오 아시아델타은행(BDA) 동결자금문제가 6자회담을 1년 반 이상 공전시켰던 사실에 유의한다면 유관국들의 의무사항 이행문제가 일정에 올라있는 지금 그의 망발은 스쳐 보낼 것이 못된다”며 “북조선이 위조화폐를 계속 찍어내고 있다느니, 경제제재가 지렛대라느니 떠벌린 것은 흑백을 전도하고 대화상대방을 자극해 비열한 목적을 달성하려는데 있다고 밖에 달리 볼 수 없다”고 지적
 - 통신은 “미 강경보수세력들은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는 지난 수 십년간 미국의 제재 속에서 살아왔고 미국과 경제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없으므로 미국이 아무리 제재를 가한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덧붙였음.



- RFA, “北 권력층담당 심장전문의 6명 美연수 추진”(4/14)
 - 대북 의료지원사업을 펴고 있는 미국의 한 민간단체가 북한에서 권력실세들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심장전문의 6명의 미국 연수를 위해 미 국무부에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이들 심장전문의는 미 민간단체가 평양시에 있는 한 병원에 기증한 심장관련 진단기기의 작동 방법 훈련과 미국의 심장질환 치료·수술 연수를 위해 미국 민간단체를 통해 방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RFA는 말했다.

다. 중·북 관계

- “北, 식량난 탓 한국 대신 중국 택할 것”<홍콩언론>(4/20)
 - 홍콩 시사주간지 아주주간(亞洲週刊) 최신호는 20일 국제 곡물가격의 급상승과 남북한 관계 경색에 따라 식량난에 처한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
 - 아주주간은 “국제 쌀값 상승과 6자회담의 교착 상황, 실용주의 보수 색채의 한국 신정부 등장으로 북한이 전통 혈맹인 중국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북한은 특히 최근 중국에 식량원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 지난달 14일 류샤오밍(劉曉明) 북한주재 중국대사는 북한의 이용남 신임 무역상과 회견하는 자리에서 북·중 무역관계의 지속 발전을 협의하면서 식량원조를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北, 베이징 올림픽에 김영남 참가”(4/18)
 -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이날 북한 당국자들이 최근 회의를 갖고 김정일 위원장이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공개적인 국제 행사에 참가하는 데는 아직 시기와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파견해 중국에 최대한의 예의를 표하기로 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 中, 발갈이용 디젤유 대북지원 결정(4/15)
 - 중국 상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5일 대외원 조항목입찰위원회를 열고 제한입찰 방식으로 봄철 발갈이용 디젤유를 구매해 북한에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하이(上海)자동차수출입유한공사, 중국화공건설총공사, 룡성(榮盛)석유화학주식유한공사 등 3개사를 입찰 참가자로 결정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부시 7월 답방..한미관계 급진전될 듯(4/20)

- 이명박 대통령의 방한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 대통령의 방미에 이은 답방 형식으로 부시 대통령은 일본에서 개최되는 G-8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길에 한국을 찾을 예정

● 李대통령-부시 정상회담 내용과 성과(4/20)

- 한·미 두 나라 정상은 이전 진보 정권 10년 간 손상된 한미동맹을 최대한 신속히 복원하는 동시에 그간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 양국 관계가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확대심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가임.
- 양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국제 정세와 안보 수요가 급변함에 따라 한미동맹도 새롭게 변화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미래비전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21세기 전략동맹은 ▲서로 공유하는 가치와 이익의 공감대를 굳건히 하는 '가치동맹'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사회·문화동맹 등 포괄적 분야로 확대하는 '신뢰동맹' ▲동아시아지역 및 범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평화구축동맹' 등 크게 3가지.
- 양 정상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맹관계 구축 이외에도 북핵문제에 대한 확고한 공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모멘텀 확보, 주한미군 3천500명 추가감축 중단,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매국(FMS) 지위를 나토·일본 수준으로 향상, 한국의 미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양해각서 체결, 미 쇠고기 한국 수입 전면 허용, 방위비 분담금제도 개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 양 정상은 또 북한의 완전한 핵 프로그램 신고가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뒤 북한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신고 등 핵폐기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반 조치를 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같이했음.
- 양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FTA가 양국의 경제뿐 아니라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위해 양국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 양 정상은 양국간 실질 경제협력 확대 방안,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고, 우선 경제협력 확대 방안과 관련, 양국은 한국의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을 위한 양해



각서(MOU)를 18일 체결

- 양 정상이 양국 청소년들간 교류확대를 위해 한미 청소년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통해 민간·학술 분야에서의 협력증진 방안을 계속 모색하며, 평화봉사단원들의 재방한 계획을 추진키로 한 것도 양국간 실질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당장 우리 정부는 청소년 교류와 관련, 올해 안에 교포 2세 400명과 미국인 100명 등 총 500명의 원어민 교사를 채용키로 했음.
-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 환경, 재난구조, 초국가적 범죄, 인권문제, 대테러 국제연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PKO(평화유지군) 활동 등 범세계적 이슈에 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함.

● 부시 “北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해야”(4/20)

-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며, 이것이 한미 양국에 이익이며, 동맹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 부시 대통령은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문제와 관련해 “미국 의회는 보호주의를 거부해야 할 것이며, 한국과 같은 우방에 등을 돌려서는 안된다”며 “미국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FTA를 통과시키는 것이며, 미 의회는 이를 연내에 비준해야 하며, 미 의회에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음.
- 부시 대통령은 또 대외군사판매차관(FMS) 조건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이 FMS에 있어 한국의 구매국 지위 격상을 요구했으며, 이를 강하게 지지한다”면서 “미국 의회가 이를 타결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음.

● 韓美 비자면제프로그램 MOU 체결(4/18)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마이클 처토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 국토안보부 본관 프레스룸에서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과 보완조치 강화 등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
- 정부는 미국 VWP 시행을 위해 오는 8월말까지 미국측과 이행약정을 체결하고, 9월말까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는 밝혔고, 미국측도 9월말까지 VWP 시행에 필요한 전자여행허가제와 출국통제 시스템 구축을 끝낸 뒤, 한국에 평가단을 보내 준비실태를 최종평가하는 작업을 11월말까지는 마친다는 계획임.
- 준비 지연에 따른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12월부터는 비자없이 미국 입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하려면 전자여권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고 사전에 미국 정부가 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제공하고 여행자 승인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 미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지금처럼 비자를 받아야 함.



● **李대통령 “쇠고기 타결..이젠 한미FTA”(4/18)**

- 이명박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것과 관련,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걸림돌이 됐던 쇠고기 문제가 합의됐다는 전화보고를 농림수산물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다”면서 이제 한미FTA 조속 발효에 매진을 다해 줄 것을 당부
-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미 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CEO(최고경영자)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한미FTA가 반드시 체결돼야 한다’는 강한 집념을 보여주고, 또 지지를 보내줬기 때문에 양국 대표들이 어떻게든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그래서 합의가 됐다”고 말했다.

● **李대통령, 美의회에 한미FTA 조속 비준 요청(4/18)**

- 이 대통령은 워싱턴 의회의사당에서 열린 낸시 펠로시 의장 등 하원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한미FTA가 양국의 공동이익을 증진함과 동시에 한미관계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뒤 “미 의회가 여야를 초월해 지원해 달라”며 조속한 비준을 당부했다고 배석한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올 초 미 의회가 저의 ‘당선축하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감사한다”면서 “한미동맹관계를 한단계 더 격상시키기 위해 계속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 **美하원에 ‘한국인 전문직 비자부여 법안’ 제출(4/17)**

- 에니 팔레오마배가 하원 외교위 아태환경소위 위원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즈음해 한국의 전문직 인력들에게도 이미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 전문직 비자쿼터를 부여받고 있는 호주·싱가포르 출신들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토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음.
- 팔레오마배가 위원장은 한미 양국간 교역규모가 지난 2006년을 기준으로 820억달러로, 연간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를 부여받고 있는 호주와 비교해 3배에 달하고, 이미 5천400개의 비자를 받고 있는 싱가포르의 2배에 달한다며 한국을 전문직 비자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게 경제적·정치적으로 타당하다고 밝혔다.

● **李대통령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투자해달라”(4/17)**

-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뉴욕 플라자호텔에서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코트라와 전경련이 공동 주관한 ‘한국 투자환경 설명회’에 참석해 화이자, 존슨앤존슨, 보잉, JP모건체이스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세계 유수의 기업 대표들을 상대로 한국 투자를 요청했음.
- ◇ “더 기업친화적 될 준비” = 이 대통령은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친기업)’ 정책을 소개하며 세계적 기업들의 투자를 당부
- ◇ “나는 (주)대한민국 CEO” =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초의 CEO



출신 대통령'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

- ◇“금년 내 모든 것 바꾸려 한다” = 이 대통령은 투자설명회에 앞서 미국 경제계 인사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도 대한(對韓) 투자를 당부
- ◇“한미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 = 청와대는 이번 투자설명회와 미 경제인 오찬 간담회를 통해 한국과 미국 기업인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됐다는 평가.

● 주한 미 총영사 “비자면제로 양국관계 더 돈독”(4/17)

- 주한 미국대사관의 줄리아 스탠리 총영사(57)는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서면인터뷰를 통해 “양국 국민이 자주 만나는 것만큼 (양국관계 증진에) 좋은 방법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이 늘어나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경험들이 미국에 더 많이 소개돼 인지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반대로 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李대통령 “친기업 환경위한 적극 노력이 FTA전략”(4/17)

-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미국의 투자자, 대기업 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코리아: 아시아를 향한 관문 (Gateway To Asia)’을 주제로 영어로 진행된 대규모 투자 설명회(IR)에서 이 같이 밝혔다.
- 이 대통령은 “한미 FTA 비준에 이어 한·EU FTA가 금년 내 타결된다면 한국은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투자관문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앞으로 중국, 일본과의 FTA도 체결된다면 한국은 세계 4대 경제권 모두를 연결하는 핵심고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새 정부는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특히 금융산업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적으로 역량있는 금융전문가를 적극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특히 이 대통령은 “외국 기업 뿐아니라 국내 기업들에 조차 과도한 규제는 기업 활동의 커다란 장애물”이라며 “앞으로 경제 활동에 장애가 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모든 규제들은 원점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강조

● ‘한미전략동맹 3원칙’ 의미와 과제’(4/16)

- 이 대통령은 “21세기의 새로운 국제환경에 직면해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 플랜을 짜야 한다”면서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 동맹의 3원칙을 제시

● 한미동맹 새로운 기회..실천이 중요 <美 전문가들>(4/16)

- 코리아소사이어티는 이날 뉴욕에서 마이클 아마코스트 전 국무부 차



관, 토머스 허바드 전 주한 미대사, 에번스 리비어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 등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동맹의 새로운 출발’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향후 한국과 미국이 동맹 강화를 위해 주력해야할 과제를 논의

- 이들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간의 인식 차이가 줄어들고 양국 관계 강화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입을 모으면서도 여전히 도전과제들도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 **李대통령 “北위협에 도와주고 협상하는 것 없다”(4/16)**

-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차세대 한인동포와의 대화’에서 “지금 북한의 발언이 군사적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군사적 발언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적으로 도움을 주는데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이)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도움을 줄 자세가 돼 있다”고 강조
- 이 대통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미국이 FTA를 승인하면 한국도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올해 FTA를 맺게 되면 한미 관계가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한국 뿐 아니라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지아대 美 관리 대상 북한포럼 개설(4/15)**

- 미국 조지아대 부설 국제문제연구소(GLOBIS: 소장 박한식 교수)는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조지아주 애션스시(市)에 있는 UGA에서 북한문제에 관심이 있는 관료와 언론인 및 재계인사들을 대상으로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지식을 집중적으로 전수하고 토론하는 ‘북한포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 **한미, 주한미군 2만8천500명 수준 동결키로(4/15)**

- 정부 소식통은 15일 “주한미군 3단계 감축계획은 대구의 제19전구 지원사령부 규모를 줄이고 미2사단의 1개 여단을 이라크로 배치하며 최종적으로 전투기와 아파치 헬기 등을 줄이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실제적인 군사위협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합방위력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는 데 양국이 공감하면서 주한미군 3천500명의 감축계획을 중단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병력 3천500명은 물론 전투기, 헬기의 철수계획도 동결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



- “美, 韓 전작권 이양 재협상 요청시 응해야” <美보고서>(4/15)

 - 한미동맹강화를 위해 미국 정부는 당초 오는 2012년 4월17일로 합의된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이양에 대해 한국측에서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이에 긍정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그룹이 14일 건의
 - 또 내년 1월 취임하는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한미 양국이 추구하는 글로벌 동반자 관계 및 동맹의 목표를 상세히 기술한 동맹비전에 관한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이 그룹은 주장
 -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아·태연구센터는 지난 1월 말부터 전직 미 행정부 관리, 학자, 한반도 전문가 등 초당적 인사들로 연구그룹을 결성, 3개월여동안 한미동맹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를 연구, 이날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

- 김대중 전 대통령 내일 방미(4/14)

 -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10박11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15일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출국
 - 김 전 대통령의 방미는 지난해 9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내셔널프레스클럽(NPC) 등의 초청을 받아 방문한 이후 약 7개월만으로, 4.9 총선에서 당선된 박지원 비서실장이 수행하며, 이번 방문은 포틀랜드대학과 포틀랜드 시장, 전미국제문제협의회(WAC), 하버드대 총장, 터프스대 플레처스쿨의 초청으로 이뤄졌음.

- 柳외교 “한미정상, 미래 발전방향 협의할 것”(4/14)

 - 유 장관은 이날 서울 도림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하고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미간 공조를 긴밀히 하는 방안이 협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6자회담 참가국들이 오랜 기간 노력해온 만큼 빠른 시일내 이런 노력이 조기 성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6자회담의 개최 시기를 명확히 제시하긴 어렵지만 5월 하순 이전에는 열려야 구체적인 핵폐기 단계를 위한 협의를 하고 사찰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벨사령관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동맹 강화”(4/14)

 - 벨 사령관은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열린 제14차 한·미 국방분 석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미동맹의 근간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으로, 한반도의 안정은 유엔사나 연합사가 아닌 이 조약을 통해 유지돼 왔다”고 말했다.
 - 그는 “전작권 전환 일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5년 계획의 한·미 군사 연습 프로그램이 수립되는 등 전작권 전환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 3월 키리졸브 연습은 새로운 연습 모델을 적용한



것으로, 오늘 밤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준비태세 연습이었고 대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음.

- 그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양국군의 역할 및 구조와 관련, “현재에도 미국의 1개 군단이 전구·전쟁 계획 지원을 위해 한반도로 전개할 경우, 한국군의 4성 장군이 지휘하는 1,3 야전군사령부로 전술 통제 전환된다”며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되며 이때 선임 지휘관은 한국군 장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 한미FTA 피해구제 방안 이달 중 마련(4/14)

- 한나라당 조운선 대변인은 여의도당사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5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FTA 등 민생현안을 처리할 것”이라면서 “한미 FTA 처리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동시에 4월 중에 FTA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를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고,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중심이 돼 준비를 하고 곧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한·일 관계

● 李대통령-후쿠다 내일 한일정상회담(4/20)

-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20일 저녁 특별기편으로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 1박2일간의 일본 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다. 한·러 관계

● 러, 韓 경협차관 조기 탕감 움직임(4/14)

- 14일 주(駐)러 한국 대사관과 러시아 언론 등에 따르면 러시아가 당초 2025년까지 현금과 현물로 갚기로 한 경협차관을 2012년 말 안에 청산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현재 한국 정부가 러시아에서 돌려받지 못한 경협차관 규모는 거의 13억 달러에 달하는데 러시아는 이 돈을 2012년 말까지 현금이나 현물 둘 중 하나의 방식으로 갚을 계획을 갖고 있고 러시아 재무부가 최근 이 같은 안을 이미 내각 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 러시아는 1991년 노태우 정권 당시 한국에서 14억 7천만 달러를 경협 차관 명목으로 빌려간 뒤 일부를 현물로 갚아왔으며 지난해부터는 2025년까지 매년 2차례에 걸쳐 7천만 달러씩 원금을 상환하기로 했다.



라. 중·일 관계

- **日, 방위력 대폭 강화 추진..中 군사력 증강에 맞대응(4/20)**
 - 일본 정부가 자국의 방위정책의 기본 지침이 되는 '방위계획 대강'을 5년만인 내년 중 대폭 개정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도
 - 일본 정부는 새 방위대강에서 중국군의 군사력 확대에 대한 자체 방위력 정비를 명기할 방침으로 알려졌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방위성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방위성 개혁도 포함할 방침이며, 일본 정부는 올해내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신설, 방위대강안을 만들어 내년말까지 각료회의의 승인을 얻을 방침
 - 일본 정부는 그동안은 방위대강을 부분 수정해 왔으나 이번에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에 대비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수준으로 개정할 방침

- **“후쿠다-후진타오 ‘핑퐁외교’ 추진”<교도>(4/15)**
 - 다음달 초로 예정된 일·중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탁구 경기를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교도통신 보도
 - 소식통에 따르면 후 주석은 5월6일 방일, 7일에 후쿠다 총리와 정상 회담을 갖고 10일이나 11일 귀국할 계획

- **“후쿠다, 후진타오에 ‘티베트’ 친서”(4/15)**
 -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국제적으로 비판이 고조되고 있는 티베트 시위 강경 진압 문제와 관련해 사태 진전을 희망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메시지 내용은 ▲관계자의 냉정한 대응 ▲정보 공개 ▲대화 노력 등 3개항을 골자로 하고 있음.

- **“日-中, 후진타오 방일시 공동문서 채택 추진”(4/17)**
 - 일본과 중국 정부는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되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국빈방문 때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지침이 될 공동문서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막바지 문안 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의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외교부장은 오는 17일부터 4일간 일본을 찾아 후 주석의 방문 준비와 공동문서 내용 등에 관해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외상 등 일본 지도자들과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음.
 - 현재까지 드러난 공동문서의 골자를 보면 공통의 목표로서 '전략적 호혜관계'의 확대를 명시하고 중점 협력분야로서 환경·에너지 정책과 한반도 비핵화를 핵심으로 하는 동북아시아 정책을 담게 될 것이



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

마. 중·미 관계

● 中, 美환율정책에 첫 정면대응..弱달러 중단촉구(4/15)

- 중국 국제금융보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리용(李勇)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 선진국들이 책임있는 환율정책으로 금융위기에 대응하라고 촉구
- 리 부부장은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이후 미 달러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면서 국제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고 세계경제의 성장둔화가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각 경제공동체들이 통화팽창과 인플레이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바. 일·러 관계

● 러-日 외무, 쿠릴열도 분쟁 해결 다짐(4/15)

- 러시아와 일본 정부가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 영유권 분쟁 협상에 좀 더 적극적이면서 신중한 자세로 임하기로 했다고 이타르 타스 통신 등이 보도
- 코다마 카즈오 일본 외무상 대변인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일 외무장관 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양국이 최우선 과제로 영토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전 보다 좀 더 신중히 협상에 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 장관은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외상과의 회담 직후 “영토 분쟁은 양국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해결 방안을 찾는 일 또한 인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양측 모두 그 방안을 찾고 있으며 상호 최종적으로 수용할 만한 해답을 찾기 위해 신중한 대화와 협상을 계속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 기타

● 브라질 수석장관 韓·日·美 연쇄방문(4/18)

- 브라질 정부의 수석각료인 달마 로우세피 정무장관이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
- 보도에 따르면 로우세피 장관은 이날 오후 브라질을 출발해 서울에서 이틀간 머문 뒤 일본에서는 나흘간 도쿄와 교토를 방문할 예정이고, 27일부터는 미국을 방문 예정
- 로우세피 장관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동안 상파울루~리우 데 자네이루 및 상파울루~캄피나스를 잇는 고속철 건설사업에 대한 한국기업의 참여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안에 구체적인



건설계획이 완료될 예정인 고속철 건설사업은 공사기간이 5년이며, 재원은 모두 민자 유치를 통해 조성됨. 오는 10월께 입찰조건이 정해지면 내년 상반기 중 최종사업자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동북아연구실 제공